

#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정부·민간환경단체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실증연구



정 병 옥  
경희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4학기

## 전 체 목 차

I. 서론
II.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고찰
1. 기후변화협약의 현황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과 가입 의무 사항
3.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논리
III.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과정에서의 민간환경단체의 활동과 역할
1. 민간환경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의 이론적 근거
2.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현황
IV. 실증분석
1. 연구의 설계
2. 조사결과 및 분석
V. 결론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과 전개방향

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관해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중국 및 G-77 그룹 등 개발도상국들의 자발적 또는 반강제적 동참방안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세찬 이해대립과 파상공세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선진국 리스트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계획이어서 우리 나라와 멕시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들과 중국, 인도 등을 대상으로한 의무감축 선진국 가입문제 등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치열한 공방이 회의의 시작부터 전개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3.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논리

#### (1) 미국

지난 98년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가 열린 바 있다. 175개 국가 대표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제3차 총회의 합의를 토대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은 "0%"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제시하였다.<sup>16)</sup> 일본과 함께 미국은 CO<sub>2</sub> 감축에 소극적인 편이며, 각국의 사정이 다르므로 CO<sub>2</sub> 감축량을 국가별로 차별화 하는, 삭감정책에 신축성을 두자는 편이다. 미국은 감축비율에

16) 미국은 0% 감축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의 주 대상이 이산화탄소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 삭감의 대상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모든 온실가스 즉, 염화불화탄소(프레온 가스),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저의는 이미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였고, 세계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배출량을 삭감할 경우 이로 인한 에너지 및 산업구조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김동수,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정치 :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p. 771~789.

있어 배출권거래제와 공동이행제를 제안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일정기간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부과한 뒤 이보다 적게 배출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 제도는 교토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다.<sup>17)</sup>

미국은 감축방식에 있어서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일정한 비율을 감축하는 단일 감축률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예외 없이 정확히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2008년 이후에 도입을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교토회의의 기후변화협약 각료급 회의에서도 기존 삭감안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개도국 참여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었다.<sup>18)</sup>

미국 환경정책의 특성으로서는 기후변화저감 대책으로 기후행동 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와 같은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 엘 고어 부통령의 환경옹호적 성향도 강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1997년 "기후변화 행동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을 작성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에서는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및 시장기반의 유인책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sup>19)</sup> 또한 미국은 국내적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큼에 따라 국외에서의 공동이행을 통한 온실가스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중대국가와 체코, 러시아 등의 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 및 조립프로젝트를 수행한 것도 이러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 (2) 유럽연합(EU)

EU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15%라는 가장 높은

수치를 제안하고 있다. 물론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군소 도서 국가의 20% 감축안이 있으나 동 국가들의 비중 면에서 볼 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0)</sup> EU의 과감한 제안은 그러나 현실성이라는 측면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EU의 15%라는 것이 EU회원국 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EU 회원국 전체 평균을 의미하는 것으로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는 30%를 감축하는 대신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는 오히려 40%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비 EU 국가에서 볼 때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sup>21)</sup> 또한 EU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일정한 감축비율을 적용하는 단일 감축률 적용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선발 개도국의 감축의무 우선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2)</sup>

EU의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은 에너지 절약 행동 프로그램인 SAVE (Specific Action For Vigorous Energy Efficiency), R&D에 의한 기술보급인 THERMIE, 재생가능에너지 촉진프로그램인 ALTENER (Action to Promote a Greater Penetration for Renewable Energy Source) 그리고 운수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에너지/탄소세와 관련해서는 1992년 범 EU차원에서의 에너지/탄소세 도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EU의 국가조세권 침해주장(영국)과 역내 저개발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반대 등으로 동세 도입이 관철되지 못하고 1994년 12월 EU의 Essen 정상회담에서 에너지/탄소세 도입을 각국 자율에 맡기기로 합의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는

17) 미국에서는 이미 76년부터 국내 기업간 배출권을 사고 파는 제도를 도입해 오염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OECD, International Energy agency, 「Climate change policy initiatives」, v. 1, 1994

18) 엘 고어 미 부통령은 97년 12월 8일 기후변화협약 각료급 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의 참여를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Trading of Emission Permit), 공동 이행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이 문제가 해결 될 경우 협상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다고 밝혀 개도국 참여문제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일보, 1997. 12. 9. "교토 기후변화 협약"

19) 신성휘, 「기후변화협약관련 선진국의 협상정책 결정요인 분석연구」, 1997, 에너지경제연구원, p. 34.

20) 신장범, 전제서, p. 6.

각 회원국의 자율적인 에너지/탄소세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여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 신축성 체제에 대한 유럽의 입장은 서유럽 국가들은 이런 제도가 진정한 감축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회피수단으로 보아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국가들은 그들의 온실가스 방출량을 과다계산해서 감축 후에 남은 탄산가스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등 그 입장이 갈린 바 있다.

(3) 일본

일본은 기후변화협약 회의를 교토에서 유치하고 '5% 감축'을 관철시킬 만큼 온실가스 규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는 규제를 통해 수요가 창출되는 에너지효율의 최적화와 이산화탄소 저감 처리기술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교토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 3 종류의 온실효과가스 외에 수소화불화탄소, 피플로로 카본, 6불화황의 나머지 3 종류의 가스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적극적인 반

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이 6 종류 안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삭감 기준연도인 90년의 프레온 대체물질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기술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프레온 대체물질인 하이드로 플로로 카본(수소화불화탄소)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이드로 플로로 카본은 새로 추가될 3 종류 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95년의 경우 2만 3000t을 생산했고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수출용 가전제품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고 에너지 고가격체제를 형성시켜 왔으며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일본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에너지 절약적이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에너지 원 단위는 OECD 국가 중 스위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3.7 TOE로 미국, 캐나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향후에도 계속 에너지 환경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에너지 효율성

21) EU 가맹국의 CO<sub>2</sub> 배출 삭감 계획

가맹국	CO2 배출 삭감 계획
벨기에	5% ↓ (2000년, 1990년 대비)
덴마크	20% ↓ (2005년, 1990년 대비)
프랑스	1인당 배출량 안정화(2000년, 2tC/인/연)
독일	25% ↓ (2005년, 1990년 대비)
그리스	25% ↓ (2000년, 1990년 대비)
이탈리아	안정화 (2000년, 1990년 대비)
아일랜드	20% ↓ (2000년, 1990년 대비)
룩셈부르크	안정화 (2000년, 1990년 대비)
네덜란드	3~5% ↓ (2000년, 1990년 대비)
포르투갈	30~40% ↓ (2000년, 1990년 대비)
스페인	25% ↓ (2000년, 1990년 대비)
영국	안정화 (2000년, 1990년 대비)

자료: 신성취, 기후변화협약관련 선진국의 협상정책 결정요인 분석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7, p. 92에서 인용

22)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EU 15개 회원국들은 “현재 감축의무가 있는 35개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담을 주지 말라”라고 말해 개도국의 감축의무 면제에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우선 교토회의에서 이미 감축의무를 진 35개 선진국들의 2000년 이후 감축계획을 결정하고 개도국의 감축의무에 대해서는 이후 후속회의를 통해 결정하려는 전략으로 여겨진다.

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CO<sub>2</sub> 등 온실가스 배출은 2000년 이후부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3)</sup> 이에 따라 일본은 에너지 이용 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GDP 단위당 CO<sub>2</sub> 배출량에 대한 감축수치를 각국별로 차별화하여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된 에너지 환경기술을 배경으로 국제적 기술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술 및 첨단시설의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서 온실가스배출권 판매, 온실가스 배출감축 공동이행, 청정개발체계(CDM)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4) 개도국의 입장

이상과 같이 미국, EU, 일본의 입장을 통해 선진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의 입장을 살펴해보았다. 중국을 비롯한 G-77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정책 및 조치가 개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 지원은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4)</sup> 높은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의 누적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축소는 경제개발을 저해하므로 기후변화협약의 직접적용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개도국의 수적 우세를 배경으로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어떠한 의무규정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은 이미 회의의 진전을 가로막을 정도로 이해대립이 첨예하게 초래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가 지난 11월 2일 개막회의에서 미국의 지원 아래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의하자 개도국들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봉쇄했다.

23) 일본의 CO<sub>2</sub> 배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단위: MtC)

회계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고속성장의 경우	1995~2000 : 3.5%    2001~2020 : 2.5%				
CO <sub>2</sub> 배출	338.89	335.70	327.94	321.94	315.03
1990 = 100	105.90	104.91	102.48	100.61	98.45
저속성장의 경우	1995~2000 : 1.8%    2001~2020 : 0.9%				
CO <sub>2</sub> 배출	329.50	317.73	300.76	285.31	264.05
1990 = 100	103.00	99.31	93.99	88.60	82.52

자료 : Climate Network Europe and US Climate Action Network

Independent NGO Evaluations of National Pla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1996.

재인용 : 신성희, 전게서, p. 57에서 인용.

24) 개도국들의 논리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즉 이들에게는 목전의 경제개발 논리가 선결문제로 도저히 이산화탄소 삭감 같은 문제들에 힘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공동책임·공동행동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구환경문제의 “선진국 책임론·개발의 권리”를 주장,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남·북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업계의 대응현황과 과제”,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세미나 자료집, 1997. p. 58. 김동수, 전게서, p. 776.

### III.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 과정에서의 민간환경단체의 활동과 역할

#### 1. 민간환경단체 정책결정 참여의 이론적 근거

이와 같이 치열한 국제환경 규제의 논의의 장을 포함한 환경정책에 있어서 민간환경단체들은 단순히 환경정책의 결정<sup>25)</sup> 및 이미 결정된 환경정책의 집행에만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의 제기과 이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정책적 해결을 도모하는, 환경정책형성과정에서의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정책의 형성을 둘러싼 중간집단의 역할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제시될 수 있으나 이슈생산자로서의 역할,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지적할 수 있다.<sup>26)</sup>

##### (1) 이슈생산자로서의 역할

환경정책이 결정되는 과정<sup>27)</sup>에서 참여집단간의 역동적인 정치적 과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쟁점이 발생할 때 형성되는 정책 참여자들의 관계 망을 보통 이슈네트워크라 일컫는다.<sup>28)</sup>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정도의 상호의존성과 몰입도를 지닌 많은 수의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정책이나 쟁점을 정책구조의 결정에 있어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시민운동은 참여민주주의의 문화적 운동에 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간환경단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첫째, 환경정책에서의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견해를 피력한다. 둘째, 문제에 대한 예측 또는 해결책으로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셋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연결시킴으로써 공익집단의 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정책방향을 정당화시킨다.<sup>29)</sup> 환경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모형이란 정책결정에 있어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와 정책결정자인 정부 사이의 그물과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말한다. 단지, 이 네트워크는 비공식적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상호의존관계는 제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이슈네트워크의 정책결정체제에서 민간환경단체는 이슈의 생산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의 유기적 형성망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 (2)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민간환경단체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여론확산을 통한 정부에의 요구투입을 위한 장치라는데 있다. 특히 민간환경단체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구성원 및 국민들의 관심을 동원하거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이라 한다.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정보 제공활동은 정치인과 조직구성원 및 국민들의 환경의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책활동의 자료로서, 조직구성원과

25) 정책결정은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래의 활동계획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공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려고 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Dror, Y. 「Public Policy making Reexamined」, Chandler, 1968.

26) 사득환,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 비봉출판사, 1997

27)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모형들이 제시되어왔다.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엘리트모형, 다원주의 모형, 체제모형, 제도론적 모형, 코프라디즘적 모형, 관료정치모형 등이 있다. 이 각각의 모형들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정책결정을 두고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28) Helco, H.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 Establishment."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8, pp.94~105.

29) Wilson, J. 「Introduction to Social movements」, 1973, N. Y.

국민들에 대해서는 환경쟁점에 관한 여론형성 및 찬반행위를 표출하도록 촉진한다. 그 결과 다양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신규회원, 기부자 등을 통해 조직생존에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 (3) 정책대안 제시자로서의 역할

오늘날 민간환경단체들은 종래처럼 단순히 이슈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은 한편으로 민간환경단체들의 전문성이 증대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정자로서의 관료집단의 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민간환경단체들은 환경문제와 같은 하나의 쟁점에 관심을 갖는 단일쟁점은 물론 여러 영역에 걸쳐 관심을 갖는 복수쟁점집단에 이르기까지 그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이들 민간환경단체들은 관련 전문가를 채용 또는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환경정보를 수집·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능력의 한계도 이들 민간환경단체집단의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정책결정자들은 민간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환경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가치갈등이 치열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하며, 다른 대안이 부재할 때 이들 민간환경단체들의 대안제시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하게 된다.

### (4) 감시자로서의 역할

민간환경단체가 갖고 있는 역할 가운데에서도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역할은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공직을 담당케 하는 대표민주주의 이론에 그 토대를 둔다. 그러나 행정부의 비대화와 대

표민주주의의 의회의 행정부 예측, 전문성 부족 등의 현상을 통해 민간단체들을 통한 정책감시자로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간환경단체집단은 정부기관의 환경정책활동을 감시하고, 그것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을 사회재점화하는 동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시민여론을 자극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며, 정부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2.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현황

현재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곳은 한국기후에너지연대 소속 12개 단체이다. 이는 YWCA, 경실련환경개발센터,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청년생태주의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생환경연대회의,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민간환경단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들은 원자력 이슈를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2010년부터 감축할 것과 친환경적 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노력 촉구, 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 주장,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확대 주장과 캠페인 활동,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보공개의 촉구하고 정부 공무원 간담회를 통한 그들의 주장전개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원자력이용에 대한 반대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에 있어서의 협의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민간환경단체의 범위는 이들 12개 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지며 설문조사의 작업도 이들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IV. 실증분석**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논문에서는 민간환경단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정책의 평가와 현재 기후변화협약의 정부·민간환경단체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있어서의 요인별 상관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형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활동을 펴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의 실상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주제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분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에서의 정책평가와 정부·민간환경단체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변수선정작업과 요인분석에 의한 상관관계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1) 설문지 작성 및 표본의 선정**

**1) 설문지 작성**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형태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주어진 응답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형질문과 응답자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크게 기후변화협약에 관련된 정부의 에너지·환경정책의 평가항목과 정부·민간환경단체 네트워크 체제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원자력 이용의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는 만약 반대의견을 개진 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 중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한국기후에너지연대 소속 12개 단체의 민

간환경단체를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YWCA<sup>30)</sup>, 경실련<sup>31)</sup>, 그린체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청년생태주의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학생환경연대회의,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민간환경단체를 말한다.

**(2) 표본조사 및 조사방법**

설문조사에 있어 본 연구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문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설문 작성자에게 설문 취지를 설명한 후 정확한 응답을 기할 수 있도록 응답자에게 조언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10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판단되는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05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응답의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고 연구설계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민간환경단체 네트워크 모형에 있어서의 요인별 변수의 상관성을 판별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신뢰도 분석방법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여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대응에 관련한 정부·민간환경단체 네트워크 모형의 정책요인(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있어서의 민간환경단체 참여, 정보접근의 허용, 의견수렴, 활동의 독립성 보장, 재정적 지원책)과 정부·민간환경단체의 종합적 협조체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각 요인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

30) 프로그램 및 사회문제위원회를 조사대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31) 경실련환경개발센터를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을 하고, ANOVA Table 분석을 통해 배경별 하 이상과 같은 분석내용과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위집단(subset)에 따른 각 요인별 응답차이를 구 다음 <표 4>과 같다. 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표 4>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

구 분	분 석 내 용	분 석 방 법
기초통계분석	측정도구의 신뢰성	신뢰도분석
	민간환경단체의 정부환경정책 평가요인들의 평균값	빈도분석
주요통계분석	민간환경단체의 기후환경네트워크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요인과의 관계	상관관계분석
	인구 통계학적 배경과 기후정책 요인과의 관계	T-test ANOVA 분석

## 2. 조사결과 및 분석

###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구성

<표 5> 표본의 구성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성별	남 자	54 51.4
	여 자	51 48.6
연령별	20세 미만	-
	20세이상 ~ 30세미만	48 45.7
	30세이상 ~ 40세미만	46 43.8
	40세이상 ~ 50세미만	11 10.5
	50세이상 ~ 60세미만	-
	60세이상	-
학력별	고졸이하	9 8.6
	전문대졸	6 5.7
	대재밋졸	80 76.2
	대학원이상	8 7.6
	기타 및 무응답	2 1.9
시민단체 활동경력	1년 미만	9 8.6
	1년이상 ~ 2년미만	20 19.0
	2년이상 ~ 3년미만	26 24.8
	3년이상 ~ 4년미만	24 22.9
	4년이상 ~ 5년미만	7 6.7
	5년이상 ~ 6년미만	5 4.8
	6년이상 ~ 7년미만	2 1.9
	7년이상 ~ 8년미만	1 1.0
	8년이상 ~ 9년미만	7 6.7
9년이상	4 3.8	



구	분	빈도	백분율(%)
직위별	비상근직원급	25	23.8
	상근직원급	58	55.2
	비상근위원급	-	-
	상근위원급	3	2.9
	비상근임원급	-	-
	상근임원급	13	12.4
	비상근대표급	-	-
	상근대표급	1	1.0
	기타	5	4.8

조사대상자의 분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총 105명 중에 남자가 54명(51.4%)이며, 여자가 51명(48.6%)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상~30세 미만이 48명으로 가장 많으며(45.7%), 그 다음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6명(43.8%),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1명(1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별로는 대학재학 및 대졸이상이 80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이하가 9명으로 8.6%, 전문대학 졸업자가 6명으로 5.7%, 대학원 재학이상의 교육수준이 전체 8명으로 7.6%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에 응답한 2명(1.9%)은 박사학위 소지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경험은 2년 이상~3년 미만으로 응답한 사람이 26

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4년 미만이 24명(22.9%), 1년 이상~2년 미만이 20명(19%), 1년 미만이 9명(8.6%), 4년 이상~5년 미만이 7명(6.7%), 8년 이상~9년 미만이 7명(6.7%), 5년 이상~6년 미만이 5명(4.8%), 9년 이상이 4명(3.8%), 7년 이상~8년 미만이 2명(1.9%), 7년 이상~8년 미만이 1명(1.0%)로 구성되어 있다. 직위별 분류를 살펴본다면 상근 직원급이 58명(55.2%), 비상근(계약·임시·자발적 회원포함) 직원이 25명으로 전체의 23.8%, 상근 임원급이 13명(12.4%), 상근 위원급이 3명(2.9%), 상근 대표급이 1명(1.0%),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5명(4.8%)이었다.

<환경생각>

## 바다의 사막 “백화현상” 심각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백화현상이 일어난것은 지난 20년전부터이다. 아직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인 기온이상 현상과 수온상승,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류소통방해, 그리고 인위적인 간척사업과 인간에 의해 버려지는 오염물질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백화현상으로 인해 인간은 크게 피해본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전복, 소라, 성게등 바다동식물이 죽고 바다 생태계에 어지러워지면 언젠가 인간도 크게 후회할 날이 올것은 자명한 일이다.